

데스크시각

‘나비효과’로 변진 나주 SRF 발전소



장필수 편집부국장·전남본부장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조성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현안은 한전공대 설립과 공동발전기급 조성 등이다. 하지만 요즘 가장 ‘핫한’ 문제는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논란일 것이다. SRF 열병합발전소는 빛가람혁신도시 내 주거지와 상업 및 공공시설에 난방을 공급하는 시설이다. LNG(액화천연가스)와 SRF(고형 폐기물 연료)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플라스틱 등 가연성 쓰레기로 만든 SRF의 인체 유해 논란으로 발전소 가동이 2년째 중단되고 있다는 점이다.

급기야 불뚱이 광주시 쓰레기 대란 우려로 튀었다. 나주 SRF발전소에서 광주 양과동에 생산한 SRF를 가져다 사용하기로 했는데 발전소가 가동을 못하면서 양과동 제조 공장도 멈춰 섰기 때문이다.

가연성 쓰레기를 SRF로 만들지 못하면서 양과동 광역매립장 반입량이 급증하자 매립장 측이 가연성 쓰레기 반입

중단 조치를 내렸고 이런 조치가 연쇄적으로 가연성 쓰레기 처리량 증가와 처리 비용 폭증을 불렀다. 경영난에 처한 수거 업체들이 가연성 쓰레기 수거를 거부할 경우 광주는 하반기에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나주 SRF발전소 가동 중단 장기화가 나비효과로 작용해 SRF는 이제 나주와 전남(SRF 생산시설이 목포·순천에도 있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까지 포함한 광역 쓰레기 문제가 된 것이다.

2년째 해법 못 찾코 표류

그렇다면 해법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우선은 나주 SRF 문제를 조율하고 있는 민간협력 거버넌스에 맡기는 것이 순서다. 민간협력 거버넌스는 이해당사자인 한국난방공사(발전소사업자)와 혁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산업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등 5자로 구성됐다. 지난 1월 활동에 들어가 지금까지 9차례 회의를 갖고 합의점 도출에 힘을 쏟고 있지만 해법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그나마 지난 17일 열린 9차 회의에서 핵심 쟁점인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에서 입장을 좁힌 것은 다행이다. SRF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기간과 방법은 물론 가동 여부에 대한 주민 의견을

묻는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만 해 온 한국난방공사와 범대위가 다소 의견 접근을 본 것만 해도 해결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을 갖게 한다.

그 희망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참여자 가운데서도 범대위와 한국난방공사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접점을 찾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자원부나 전남도 및 나주시는 이들의 주장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갈등 조율자 역할을 해야 할 이들의 대처는 그동안 소극적이고 안이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나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지역 정치인들의 어정쩡한 자세가 사태 장기화를 불렀다는 비판도 있다.

나주 시민들은 똑같이 SRF 문제로 갈등을 빚은 충남 내포 신도시와 전주시의 해결 사례를 들면서 지역 정치인들의 무책임하고 무능함을 질타하고 있다. 내포 신도시시는 시장과 지사가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해 SRF로 설계된 발전시설을 100% 친환경 LNG로 바꿨다. 전주시는 정동영 의원이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킴으로써 전주시에 SRF가 들어서는 논리를 차단했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자치단체와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해법 모색에 나서야 한다. 이해당사자 간 의견 조율을 유

도해 거버넌스 내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한발씩 양보를 이끌어 내 가동 여부를 결정짓는 결단이 필요하다. 단,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주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킨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전제 조건은 주민 불안 해소

‘발암물질을 마시며 살수는 없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이기적인 ‘남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빛가람혁신도시는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광주 상무지구와는 다르다. 상무지구는 아파트 분양을 받아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다수였지만 빛가람혁신도시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이 많다. 광주 시민들이 쓰레기 대란을 우려해 나주 SRF발전소를 가동하라고 말해선 안 되는 이유다.

만약에 가동 중단으로 결론을 낸다면 발전소 해체에 따른 매몰비용(3500억원 + α) 보전 문제를 지원해 한국난방공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는 것도 정부와 자치단체의 몫이다. 주민들 역시 SRF 대신 청정에너지 난방을 원한다면 난방비 상승분을 가까이 수용해야 한다. 한발씩 양보하지 않는다면 해법은 없다.

/bungy@kwangju.co.kr

은폐칼럼

50년 전 유학 풍경

본인 부담이었다.

그 시절, 군미필 남학생들은 해외여행이 허용되지 않았기에 경쟁자가 많지 않았다. 그간의 성적, 필기, 면접 등의 선발 과정을 거쳐 유학 기회를 얻었다. 입학 관련 모든 절차는 양쪽 대학에서 처리해 주었다. 입학 허가서와 장학금을 받았지만 국내 절차가 까다로웠다.

현재의 교육부를 그때는 문교부라고 했다. 문교부가 주관하는 유학 자격 시험이 일년에 두 번 있었다. 영어와 국사 시험에 합격해야 출국 허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영어 시험은 바로 합격하였으나 국사는 떨어졌다. 일단 시험 경향을 파악했으니 국사 문제와 답안을 100개 쯤 만들어 달달 외워서 두 번째에 합격하였다.

마지막 관문으로 출국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해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 있게 행동하라는 내용과 이념 교육이었다.

드디어 모든 절차를 마치고 1969년 6월 19일, 정확히 50년 전 오늘, 미화 100달러를 지니고 김포국제공항을 통하여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지금은 해외에 나갈 때 소지할 수 있는 외화 한도가 1만 달러지만 그때는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하여 100달러였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지난 4월 말 기준 4040억 3000만 달러지만 50년 전에는 5억 5000만 달러였다.

그때의 김포국제공항 풍경은 지금의 인천국제공항과 사뭇 달랐다. 가족은 물론 많은 일가친척들이 공항에 나와서 환송해 주었다. 기념 사진을 찍고 잘 다녀오라며 격려와 덕담을 아끼지 않았다. 출국하는 아들이나 남편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떠나는 이들은 몇 발자국 가다가 돌아서고 또 돌아서서 손을 흔들고 환송객들 역시 손을 흔들며 자리를 뜨지 못했다.

세월이 쏠살같다는 말을 실감한다. 가세 열매 유학길에 올랐던 일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반세기가 흘렀다. 네발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올 때마다 두 나라의 차이를 느낀다. 처음 미국에 갔을 때 느꼈던 그 감정과 충격이 떠오른다.

아쉬운 것은 50년 전, 그렇게 어려운

때에도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지 않았다. 네발 청년들에게 우리나라는 기회와 땅, 천국 다음인데 정작 우리는 ‘지옥’이 아니냐?

우리 젊은이들이 국내에서 좁은 문을 놓고 경쟁하다 좌절하지 말고 국외에서 기회를 찾는 용기를 보고 싶다. 요즘에는 선진국 유학만 고집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네발 카트만대학교 빙하학과(Glaciology Department)에는 여러 나라 학생들이 유학을 온다. 등록금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하다.

교환 학생으로 내팔에 온 우리나라 청년이 있었다. 여행도 하고 학생들과 잘 어울렸다. 좋은 성적을 받고 한국에 돌아가더니 졸업 후에 필리핀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개발 도상국에 해외 봉사단으로 일하는 기회도 많다. 내팔에 온 젊은 봉사단원들은 2년 동안 다양한 경험을 쌓고 현지어를 상당 수준 습득하는 것을 본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김우중 회장의 말에 공감한다.



박형순 전남대 명예교수

반세기 전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다. 미국은 장학금을 주면서 유학생을 초청하기도 했다. 한국 유학생들이 등록금을 자비로 낸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강국이다. 미국 장학금 받기가 수월치 않다고 듣는다. 상황이 바뀌어 아시아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한다.

필자는 1960년대에 대학을 다녔다. 어느 날 대학 본부에 미국 테네시 주의 한 대학으로부터 교환 학생을 보내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했다. 등록금 면제에 1년간 기숙사비를 전액 지원하고 항공료만

산학연 클러스터, ‘연구 특구’ 지정 필요하다

있다. 보다 큰 문제는 클러스터 용지를 분양받은 사업자들이 본래의 활용 목적에 맞춰 개발하기 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역량을 지역과 나누기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의 개발과 활용이 매우 중요한다. 이런 점에서 우려가 크다.

광주·전남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무엇보다도 지역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양성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 기관과 지역 대학은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혁신 클러스터는 대부분 공공 기관과 지역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교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1980년대 스웨덴에서 추진되었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Kista Science City)의 혁신 IT 클러스터다. 시스타시는 공공 기관을 중심으로 스텝을

클러스터와 스웨덴 왕립대학이 활발한 교류 여건을 만들어 창조 역량을 공유했다. 그 결과 국책 연구소를 비롯한 많은 민간 연구소를 유치하면서 6만 4000여 명의 정보·통신 관련 전문 종사자가 일하는 대표적인 IT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했다.

최근 중앙 정부는 혁신도시 시종2에 관해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 기관의 추가 이전 사업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유치전에 나섰다. 광주시가 35개 기관 유치를 정부에 신청했고 전남도는 22개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 기관 유치도 중요하지만, 광주·전남에서 산·학·연 클러스터의 활용을 보다 깊게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다. 정부와 함께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공공 기관과 지역 대학의 교류 및 시너지 창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지역 대학이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에서 교육과 연구 활동을 직접 진행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빛가람 혁신도시를 광주·전남의 창조 메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를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산·학·연 클러스터를 연구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다. 혁신도시 클러스터는 창조 역량을 이끌 수 있는 지역의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지역 대학과 공공 기관이 창조성과 혁신 역량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연구와 학습 교류의 장(場)으로 조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 결정 사항이다. 혁신클러스터에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지역 대학이 함께 참여해야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이라는 본래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혁신도시 클러스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의 미래 역량과 경쟁력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社說

혈세 지원 시내버스 서비스는 엉망이러니

광주 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이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배차 시간을 지키지 않는가 하면 급제동과 육설까지 일삼는 등 일부 운전기사들의 불친절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에 접수된 시내버스 관련 민원은 2016년 822건, 2017년 602건, 2018년 953건 등으로 해마다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하루 평균 2-3건씩 접수되는 민원의 주요 내용은 승강장 통과, 승차 거부, 불친절, 배차 시간 미준수 등이다.

반면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시의 재정 지원금은 2007년 196억 원을 시작으로 2010년 352억 원, 2016년 508억 원, 2018년 639억 원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12년간 무려 4818억 원에 달한다. 준공영제란 시내버스 운영은 버스 회사가 맡지만 관리를 자치단체가 맡는 제도인데, 승객 급감으

로 수입은 줄고 인건비 등 운영비는 매년 늘면서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데도 시내버스 서비스는 제자리걸음이나 시민들의 불만은 고조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광주시가 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2016년 152건, 2017년 62건, 2018년 953건 등으로 해마다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하루 평균 2-3건씩 접수되는 민원의 주요 내용은 승강장 통과, 승차 거부, 불친절, 배차 시간 미준수 등이다.

반면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시의 재정 지원금은 2007년 196억 원을 시작으로 2010년 352억 원, 2016년 508억 원, 2018년 639억 원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12년간 무려 4818억 원에 달한다. 준공영제란 시내버스 운영은 버스 회사가 맡지만 관리를 자치단체가 맡는 제도인데, 승객 급감으

시름에 빠진 농민 위해 양파·마늘 사 주자

양파와 마늘 가격이 폭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잉 생산 탓이다. 올해 전남 지역 양파 생산량은 사상 최대의 착황 호조로 43만8480t, 마늘 생산량은 36만6000t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근 가격 시장의 양파 도매가격은 1kg당 425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8.4%, 간마늘 도매가격은 1kg당 5433원으로 지난해보다 19% 정도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양파 재배 면적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처리난에 직면했다.

마늘 역시 과잉생산이 예상되면서 농민들의 속은 점점 타들어가고 있다. 때마침 정부는 양파 긴급 출하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양파 9만4000t을 격려해 공급 과잉량 10만~12만t을 해소한 데 이어 양파 2만6000t을 추가 구매하고 수출물류비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의 약발이 얼마나 먹힐지는 의문이다.

농산물은 소비 진폭이 적어 생산량이 조금만 달라져도 가격 등락 폭이 커진다. 허물여 올해 생산량이 평년에 비해 양파는 13%(과잉 예상 물량 15만t), 마늘은 20%(/ 6만6000t)나 많을 전망이다. 가격 폭락을 결코 피하기 어렵다.

이에 전남도는 각급 기관·단체와 역할을 분담하고 자체적으로 수급 안정과 판촉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양파·마늘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양파와 양파즙의 온라인 특별 이벤트 행사도 추진한다. 농협중앙회전남분부는 농협 및 남해화학 등 계열사와 서울·광주 등 도시 농협을 통해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고 있다.

농민이면 누구나 풍년을 기원하며 농사를 짓겠지만 풍년을 맞아 오히려 농가의 소득이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반복되고 있다. 수확의 기쁨보다는 오히려 시름에 빠진 농민들을 위해 우리 모두 ‘양파·마늘 사 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자.

無等鼓

선진국들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증장애인 돌봄미 제도’를 비롯한 장애인 지원 제도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직업을 갖거나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제도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 활동 측면에서 보면 500년 전인 조선시대의 정책이 현대보다 더 합리적인 면이 있었을 을 알게 된다. 조선시대에는 장애인들 자립이 가능한 사람과 불가능한 사람으로 나뉘 지원 정책을 폈다.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은 지자체가 구휼하고 자립이 가능한 사람은 직업을 주어 스스로 살아가도록 한 것이다.

자립 가능한 이들 중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로 맹인이나 소경 등으로 불린 시각장애인이다. 국가는 이들을 교육시켜 직업까지 주었다. 심지어 태종 때에는 세계 최초로 국가가 설립한 시각장애인 지원 기관이 있었다. ‘명통사(明通社)라 불린 이 단체에 소속된 시각장애인 독경사들은 국가 행사에서 독경을 담당하고 녹봉으로 쌀과 배를

받았다. 이들은 나라의 안녕을 비는 경을 읽거나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냈다.

또한 시각장애인에게는 ‘관현맹인’이라는 관직이 주어지기도 했다. 유교 풍습에 따라 왕비나 궁녀가 참여하는 연회에는 남자 악사를 쓸 수 없었던 탓에 맹인 악사를 세웠는데 이를 관현맹인이라 한다. 한편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으로는 점술가가 가장 많았다.

최근 100년 넘게 유지돼 온 시각장애인 안마업 독점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 독점권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13년 동안 다섯 차례 제기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에서 처음 한 번을 제외하곤 네 차례 연속 합헌 결정이 났다. 하지만 또다시 헌법소원심판제청이 제기되자 최근 전국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안마는 우리에게 직업이 아닌 생존’이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평등하지 못한 신체 가진 장애인조차 배려하지 못하는 법이라면 과연 평등한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재희총 사회부장 chae@

안마 독점권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9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직구) 독점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체 육 부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